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3 간담회실



민주노동총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순서

사회

조순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국장

인사말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

발제

발제1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

발제2 “늘봄학교 도입 전망과 과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토론1 이희진(초등돌봄전담사)

토론2 손재광(방과후강사)

토론3 황수진(교사)

토론4 배수민(학부모)

토론5 이성희(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장)

인사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안녕하십니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입니다.

오늘 늘봄학교 긴급 토론회를 열게 해주신 진보당 강성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는 늘봄학교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 주체마다 입장이 다르고 교육부는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당초 국가책임 공적 돌봄이라는 취지와 방향에 맞게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긴급 진단을 해보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잘 진단하고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하자는 것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바람입니다.

여전히 늘봄학교는 현장의 주체인 초등돌봄(보육)전담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교사를 비롯해 다양한 인력들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늘봄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양한 인력은 또다른 초단시간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못된 관행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싸웠던 것 중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 아닙니까.

또한 돌봄교실 탈락자들이 해소되지 않고 ‘다양한’ 틈새, 일시 돌봄으로 문제 해결을 했다는 평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돌봄교실은 탈락된 아동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돌봄 강화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초등(보육)돌봄전담사들은 늘봄학교를 통해 업무는 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일방적으로 업무를 맡으라는 지시만 했습니다. 이미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오고 있고 방중에는 독박돌봄으로 휴게시간조차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돌봄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업무를 배정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처우개선은 안중에도 없고 일만 몰아주려는 사고는 이제 더는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방과후강사들도 다들 게 없습니다. 늘봄학교를 통해 아이들과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 고문으로 끝났습니다. 유능한 강사들을 두고 학교 밖만 바라보는 모습 역시 바뀌어야 할 관행입니다. 수입이 불안정하고 특수고용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방과후강사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현장의 노동자도 행복해지는 늘봄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해주신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진보당 국회의원 강성희



국가의 교육과 돌봄 정책은 보태고 뺄 말이 없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출생률 문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 교육과 돌봄의 격차 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과제와 영역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를 110대 국정과제로 꼽아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향만 옳다고 해서 수행 과정과 결과까지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늘봄학교가 제대로 된 여건도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선생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에 시달려야 했고, 학생들 역시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없었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돌봄전담 선생님들에게는 공짜 노동, 압축 노동까지 강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돌봄교실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홍보에 비해 실제 이용 인원이나 돌봄 사각지대 해소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평가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면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그간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목표 아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서 차근차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개선 방안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귀담아듣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급하게 제기된 토론회에도 먼 곳에서 참석해 주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 선생님들과 박미향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

주신 강은희 정책연구원장님, 정재훈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이희진 선생님, 손재광 선생님, 황수진 선생님, 이성희 센터
장님, 배수민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발 제

발 제 문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발 제

“늘봄학교 추진현황 및 개선 과제”

강은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

발제 1.

늘봄학교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 늘봄학교 시범지역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강은희(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I. 늘봄학교 추진 경과

1. 도입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과제 중 초등전일제 교육을 제시함
 - 초등전일제교육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 2023년 1월 9일 교육부 발표
 -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산을 통해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진 방안 수립

도입 필요성



☑ 모든 학생에게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 지원 필요

1

그림 6 늘봄학교 도입 필요성

- '전일제'라는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를 담아 '늘봄학교' 이름으로 정책 추진
- 저학년에게는 돌봄,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등 수요에 따른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 고학년에게는 AI, 코딩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틈새 돌봄을 강화할 예정

늘봄학교란?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 (Educare)	정규수업 (Education)	늘봄학교 (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교과·창제 수업	오후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3~4학년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방과후1	방과후2
5~6학년			방과후1	방과후2
			틈새돌봄	지적돌봄
				희망 학생 대상 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

2

그림 7 늘봄학교 추진방안

- 지역별·학교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하여 아침돌봄, 저녁돌봄, 방학중 돌봄, 방과 후연계형 돌봄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모델 발굴 지원
-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기관 신축

2. 추진 계획

○ 추진 계획

- 2023년 5개 시도교육청에 600억원을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늘봄학교 운영 모델 발굴
- 2024년 시범교육청 7~8개로 확대
- 2025년 전국 확대

○ 시범 운영

- 2023년 5개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5개 지역 시범운영 선정
- 특별교부금 600억원 투입
- 200개 학교 대상 초 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요일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 토요방과후(경기·경북), 찾아가는 마을방과후(인천), 과학·문화·AI·SW 체험버스(대전), 농어촌 특화 문화예술 프로그램(전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
- 아침돌봄 도입(인천·대전·경기·경북), 필요한 날 이용가능한 ‘일시돌봄(경기·대전·경북·전남) 및 입출입 학부모 안내서비스(인천·대전)
-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 신규 선정하여 약 100억원 지원

구분	학교수	주요 추진 내용
인천교육청	20개교	▶ 아침이 행복한 학교(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 대상 독서, 악기, 미술 활동)
	80개교	▶ 강사선발 1차 서류심사, 회계업무 지원
대전교육청	149개교	▶ 초1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새봄교실) 운영 ▶ 시범운영 20개교 '새봄교실' 1학기 운영, 5~6학년 대상 온라인 방과후학교 무상 운영
경기교육청	80개교	▶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 시범 운영 ▶ 43개 초등학교 특기적성 참여학생에게 교육기술 기반 교과콘텐츠 무상 제공 ▶ 학력향상 지원 '하나더 프로그램' 운영
전남교육청	40개교	▶ 도시형 농어촌형 유형 구분.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학력격차 해소, 농어촌 특화(문화예술), 다문화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
경북교육청	40개교	▶ 초1 에듀케어 집중프로그램 운영 ▶ 아침돌봄 간편식 제공
	전체	▶ 1학기 1프로젝트 지원,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도입

표 7 교육청별 2023년 1학기 늘봄학교 운영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재구성

3. 2학기 추진계획

○ 2023년 2학기 2배 이상 확대 운영

- 교육청 5개->8개, 학교수 214개교 -> 459개소

○ 교육청별 운영계획

구분	학교수		주요 추진 내용
	1학기	2학기	
인천교육청	30	30	▶ 1학기 사업 지속
대전교육청	20	20	
경기교육청	80	154+74	
전남교육청	43	50+7	
경북교육청	41	41	
부산교육청	미운영	50	▶ 지역과 연계한 방과후학교운영 ▶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한 수강신청,

			회계처리 지원 ▶ 야간긴급돌봄 ‘거점형 돌봄센터’, ‘24시간 돌봄센터’ 부산시와 협력하여 구축운영
충북교육청	미운영	42	▶ 1~2학년 꿈담교실 운영 ▶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시 1강좌 수강료 지원) ▶ 친환경방과후프로그램운영
충남교육청	미운영	72	▶ 쉽과놀이중심 에듀케어 프로그램운영(돌봄대기 해소) ▶ 동네방네늘봄교실(아파트와 지자체공간 활용) ▶ 문화예술체육수업 ▶ 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체험농장 운영

표 8 2023년 2학기 운영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재구성

○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 돌봄대기 해소

○ 11월 중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단계적 확산 계획 발표

II . 초등 돌봄 현황

1. 온종일 돌봄정책과 공적돌봄충족률

- 2018년 도입된 ‘온종일 돌봄체계’는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양육환경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정부에 의한 공적인 돌봄인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를 아우르고 있음.
- 온종일 돌봄 돌봄기관별 기관의 특징은 아래와 같음.

구분	학교돌봄		마을돌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운영방식	학교 직영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지자체 직영 및 위탁	지자체 직영 및 위탁, 법인 및 개인운영	위탁
대상	초등1~6학년	초등1~6학년	초등1~6학년	18세 이하 아동	초등4~중등2학년
주요 서비스	상시돌봄 급간식 제공	상시돌봄 일시돌봄 틈새돌봄 급간식 제공	상시돌봄 일시돌봄 틈새돌봄 급간식 제공	보호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등	체험역량강화활동 학습지원활동 특성화프로그램 (주말)
종사자 기준	1교당 전일제 전담사 1명, 추가 1실당 전담사 1명 배치	센터장, 1실당 전담사 1명 배치	센터장 1명, 돌봄교사 1명을 필수인력으로 배치하되, 이용아동수와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돌봄교사 추가 배치 (상시돌봄 20명 기준 교사1명)	아동수에 따라 인력배치 -아동 10명 미만 시설장 1명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1명 -아동 30명 이상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영양사 1명	운영유형/반수에 따라 인력배치 -기본지원형 1개반 팀장 1명, 담임 1명 -인원축소형 팀장 1명 -주말형 담당자 1명 이상

자료: 이혜숙 이영주(2021),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사업의 서울시 운영 전략」, 서울연구원.

그림 8 온종일 돌봄기관별 특징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생수 대비 공적돌봄충족률은 증가하고 있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57,513명이 줄었으나 공적돌봄이용자 수는 모든 유형에서 늘어남.

연도	초등학생수	초등 돌봄교실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초등)	학교 돌봄터	계	공적 돌봄 서비스 충족률 (%)
2019	2,721,791	290,358	121,312	173	5,715	0	370,246	13.9%
2020	2,676,161	285,560	121,201	8,158	6,210	0	383,996	14.3%
2021	2,672,340	295,480	125,585	12,629	6,585	1,062	441,341	16.5%
2022	2,664,278	299,400	123,930	19,018	6,985	1,528	450,861	16.9%
2023	2,603,929	299,552						
19년 -22)2 3년 증감	-117,862	+9,194	+2,618	+18,845	+1,270	+1,528	+80,615	+3%

표 9 초등학생 공적돌봄충족률(단위: 명), 강성희의원실 제출 자료

- 2019년~2022년에 예비초등학생부터 초등 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종일돌봄수요조사에 따르면 온종일돌봄이용 희망비율이 2019년 30.2%, 2020년 41.0%, 2021년 45.2%, 2022년 48.4%, 2023년 49.5%로 공적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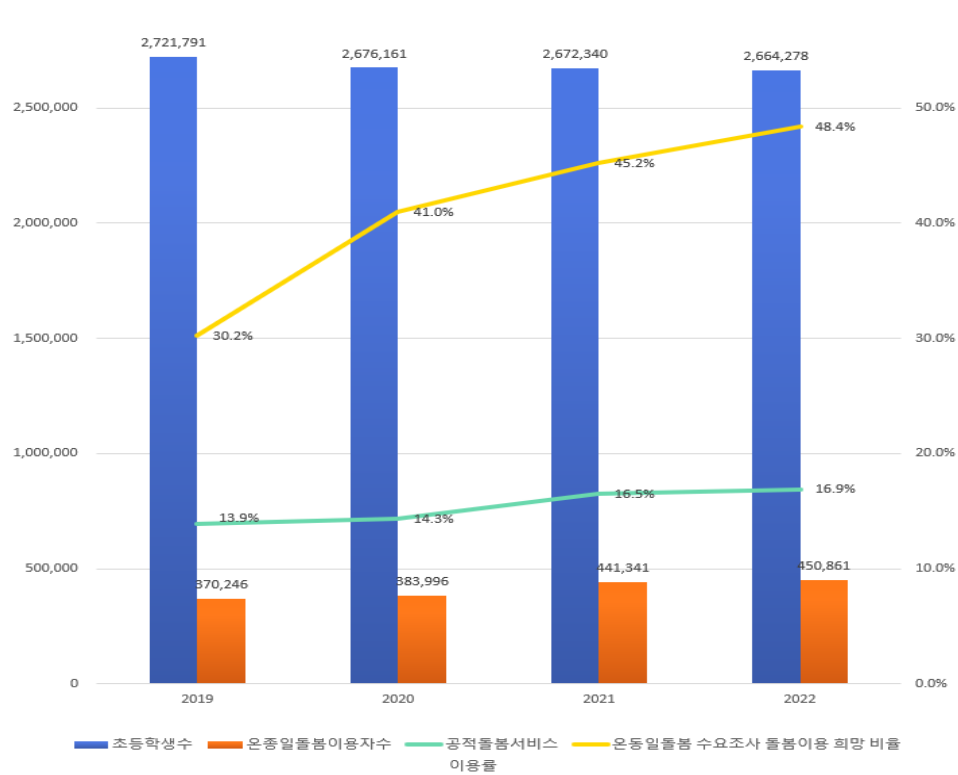


그림 9 온종일돌봄 수요와 서비스이용률

- 공적돌봄서비스 충족률이 늘어나고 있지만 희망하는 비율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2022년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돌봄 이용희망비율은 48.4%이고 공적돌봄서비스 충족률은 16.9%로 31.5%가 희망하지만 이용하지 못하였음.

2.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1) 2023년 온종일돌봄 수요 조사 결과

- 돌봄 이용 희망기관으로는 초등돌봄교실 81.4%, 학교 안에서 운영하는 학교 돌봄터 36.7%로 학교 돌봄을 가장 선호함.

구분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비율(%)	81.4	36.7	13.7	16.2	13.6

표 10 온종일돌봄 이용 희망기관(중복응답). 교육부 2023년 온종일돌봄수요조사

- 온종일돌봄 이용 희망시간은 학기중에는 수업후~15시가 63.4%로 가장 많고 15시~16시가 51.5%, 16시~17시가 44.4%임. 17시~18시는 31.8%, 18시~19시는 17.1%이며 저녁 8시까지 돌봄을 원한다는 응답은 5%임.

구분	7시~8시	8시~수업 전	수업 후~15시	15시~16시	16시~17시	17시~18시	18시~19시	19시~20시	20시~21시	필요 없음
비율(%)	4.9	13.4	63.4	51.5	44.4	31.8	17.1	5.0	1.8	7.0

표 11 학기 중 온종일돌봄 이용 희망시간(중복응답). 교육부 2023년 온종일돌봄수요조사

(2)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오후돌봄 교실 개수는 1,555개가 늘고 방과후연계돌봄은 456개가 늘고 저녁돌봄은 12개가 줄어듬. 수요조사에서 이용희망비율이 높게 나온 오후돌봄이 늘고 있으나 희망수요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음.

연도/구분	오후돌봄	방과후학교연계형	저녁돌봄
2020	10,996	1,998	51
2021	12,176	2,427	38
2022	12,406	2,472	38
2023	12,551	2,454	39
20년~23년 증감	1,555	456	-12

표 12 초등돌봄교실 유형별 개수. 단위: 개. 강성희의원실 제출자료

Ⅲ . 늘봄학교 운영 현황

1. 유형별 이용자 현황

- 2023년 1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5개 교육청의 유형별, 월별 이용아동수는 초1에듀케어 이용자가 많은 3월에 8,634명이었으나 이용인원이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임.
- 2023년 시범지역 초등학생 수는 각 교육청 교육통계에 따르면 경기 754,484명, 경북이 124,051명, 전라남도 87,046명, 인천 154,837, 대전 74,888명이며 총 1,195,306명임. 시범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특별 교부금 600억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매우 어려움.

지역	학교수	월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초1 에듀케어	틈새 돌봄	일시 돌봄	합계
경기 교육청	79	3	47	20	2722	407		3196
		4	126	26	888	452		1492
		5	139	47	837	588		1611
		6	145	43	802	565		1555
		7	141	43	808	559		1551
		8	177	43	591	621		1432
경북 교육청	41	3	94	159	725	652	2	1632
		4	246	320	116	771	11	1464
		5	291	365	116	793	13	1578
		6	291	405	141	812	24	1673
		7	316	404	141	742	11	1614
		8	304	402	141	722	12	1581
대전 교육청	20	3	0	742	254		0	996
		4	99	742	232		12	1085
		5	101	742	227		6	1076
		6	122	742	225		5	1094
		7	140	742	0		7	889
		8	119	703	0		31	853
인천 교육청	30	3	622	66	649	708		2045
		4	662	70	88	663		1483
		5	704	71	57	662		1494
		6	754	70	23	639		1486
		7	783	62	0	608		1453
		8	873	62	0	538		1473
전남 교육청	35	3		281	284	200		765
		4		137	285	205		627

		5		258	283	192		733
		6		155	283	205		643
		7	20	158	284	172		634
		8	20	136	274	164		594
총계	205	3	763	1268	4634	1967	2	8634
		4	1133	1295	1609	2091	23	6151
		5	1235	1483	1520	2235	19	6492
		6	1312	1415	1474	2221	29	6451
		7	1400	1409	1233	2081	18	6141
		8	1493	1346	1006	2045	43	5933

표 13 2023년 1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 유형별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강성희의원실 제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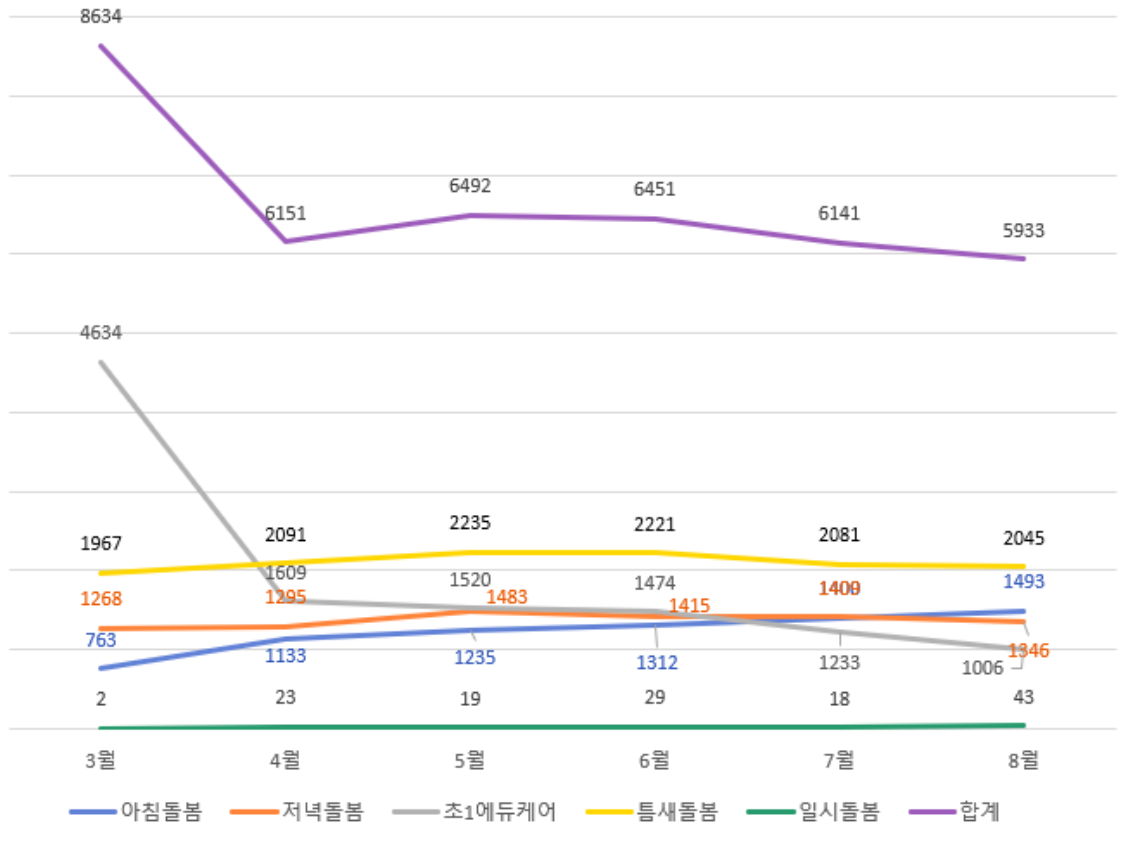


그림 10 늘봄학교 이용자 현황

2. 운영인력 현황

- 2023년 1학기 늘봄학교 시범운영 지역의 돌봄 유형별 운영인력은 학교내 인력과 외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저녁돌봄은 돌봄전담사가 주로 담당하지만 아침돌봄, 틈새돌봄, 일시돌봄은 자원봉사자와 외부강사가 맡은 경우가 많음. 경기도는 아침돌봄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음. 아침돌봄 인력이 없는 경우 교장, 교감, 교원이 하는 경우도 있음. 초1에듀케어는 교원이 주로 담당하였음.
- 늘봄학교를 전문성 있는 전담인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단시간 일자리나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은 돌봄의 질 하락과 돌봄의 안정성을 해칠 질 수 있음.

구분	인력	아침돌봄	저녁돌봄	초1에듀케어	틈새돌봄	일시돌봄
경기교육청	학교내 인력	교장, 교감, 교직원, 기간제 교사	돌봄전담사	교원 기간제교사	교사 기간제교사	
	외부인력	위탁업체 운영인력, 위탁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경북교육청	학교내 인력	교원	교원, 돌봄전담사	교원, 기간제교사 돌봄전담사	교원 기간제교사 행정인력	교원
	외부인력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지역아동센터, 외부강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외부강사
대전교육청	학교내 인력		돌봄전담사	교원 기간제교사		
	외부인력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인천교육청	학교내 인력	교원, 내부강사, 방과후학교 업무전담인력	돌봄전담사	교감, 교원, 내부강사 기간제교사		
	외부인력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전남교육청	학교내 인력	내부강사	돌봄전담사	기간제교사 내부강사	자원봉사자	돌봄전담사
	외부인력			자원봉사자		

표 14 2023년 1학기 늘봄학교 교육청별 운영인력, 강성희 의원실 제출 자료

IV . 개선방안

1. 온종일돌봄 수요를 반영한 늘봄학교 확대

- 늘봄학교의 취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23년 1학기 시범운영은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온종일돌봄 수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방과후부터 오후 5~6시까지 운영하는 오후돌봄교실을 확대하는 것이 ‘원하는 누구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하는 ‘온종일돌봄체계’의 이용률은 희망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늘봄학교가 애초의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해야 함.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돌봄수요와 이용률은 증가하고 있음.
- 온종일돌봄체계가 제공하는 공적돌봄충족률 목표를 최소 30%로 정하고 이에 맞추어 초등돌봄교실을 두배 이상 확대하여야 함.

2. 돌봄의 질 제고

-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교육부의 늘봄학교 추진방안은 1~2학년에게 오후돌봄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3학년~6학년은 방과후학교를 수강하고 방과후학교 사이에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것임.
 - 늘봄학교 시범사업은 방과후학교 수강 확대보다는 아침, 저녁, 틈새 돌봄에 집중되어 있음.
 - 늘봄학교 시범지역에서 방과후학교 1+1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이를 확대하여 늘봄학교 신청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제공하여 질을 제고하여야 함.
- 돌봄전용공간 확대
 - 초등돌봄교실이 대부분 전용교실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아침돌봄과 틈새돌봄은 도서관, 특별실, 검용교실을 사용하고 있음.

- 학교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전용교실을 확대하여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여야 함.

3. 돌봄 전담인력 확대

- 돌봄의 질은 돌보는 사람에 달려 있음. 자원봉사자, 시간제 일자리로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는 없음.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에 수반되는 행정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전일제 돌봄전담인력을 확대해야 함.
- 돌봄 전담인력 확대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함.

4.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점돌봄기관 확충

- 교육부는 늘봄학교 계획에서 특별교부금과 민간기부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매년 5개소씩 거점형 돌봄기관을 신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경남의 거점돌봄기관인 ‘늘봄’은 인근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 해소뿐만 아니라 질높은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독립적인 공간 사용 등으로 만족도가 높으며 경남교육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음.
- 학교내 돌봄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거점돌봄기관을 확충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돌봄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보장과 함께 공적돌봄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도록 해야 함.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발 제

“늘봄학교 도입 전망과 과제”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늘봄학교 도입 전망과 과제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요

늘봄학교 도입 의미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의 과제

늘봄학교 도입 의미

늘봄학교를 저출산저출생 대응 대책으로 구현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여러 사회정책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다차원적 사회정책의 주제이다. 「더불어학교, 온종일돌봄, 전일제학교」등 늘봄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명칭들이 있었다.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시기에 돌봄과 교육을 융합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완성한다는 지향은 정지 진영을 떠나 이미 합의된 본 상태이다. 명칭으로서 '늘봄'도 이미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늘봄학교를 준비해 왔으며 이제 본격적인 도입과 확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와 낳는 국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때 한국 정부는 서구 국가 중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는 국가와 낳지 않는 국가로 분류를 했다. 이 내용을 보면 저출산 요인을 더 짐작해 볼 수 있다. 일단 아이를 낳는 국가는 성평등, 다양한 가족 인정, 다문화 수용, 돌봄에 대한 투자 수준, 사회적 돌봄인프라 등이 잘 이루어진다는 평가이다. 상대적 저출산 국가는 그러한 영역들에서 상대적 수준이 낮다는 해석도 있다. 결국 남녀가 함께 키우지 않을 때, 다양한 삶의 형태를 수용하는 수준이 낮을 때, 양육지원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이 낮을 때, 사회적 돌봄 인프라 구축 수준이 낮을 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오늘 논의는 그 중 **사회적 돌봄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1 상대적 고출산 국가의 정책 성공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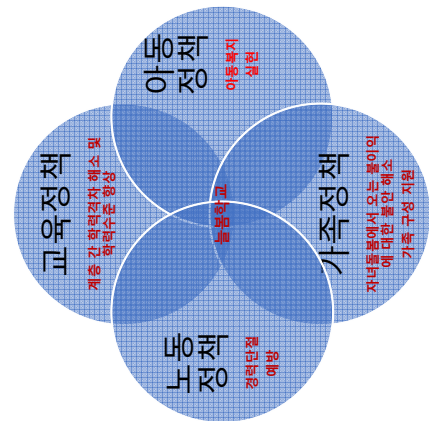
2 유럽 저출산국가의 저출산 요인

구 분	프랑스(불어권)	스웨덴(북유럽권)	미국(영어권)	구 분	독일(독일어권)	스페인(남유럽권)
합계 출산율	1.98 ('14)	1.91 ('14)	1.86 ('13)	합계 출산율	1.42 ('13)	1.27 ('13)
사회 문화적 요인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양성평등에 기초한 사회	사회 문화적요인	가부장적 사회구조 * 구 50%이상이 카톨릭신자	가부장적 사회구조 * 인구 90%이상이 카톨릭신자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사회적·제도적 수용		소극적 수용	소극적 수용
	90년대 이래 사회통합 문제로 이민 중단		사회적·제도적 수용 * 고출산 흑인·히스패닉		다양한 가족 수용성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정책 보편적 적용	사회정책적으로 일·가정양립의 제도적 지원 강화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지원 (파트타임제, 재취업 용이 등)		이민 수용성	사회적·제도적 수용
정책적 요인	세계, 연금크레디트 등 긴질적 지원 각종 수당 지원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2.8%	각종 수당 통한 적극적 지원 (육아의 사회화)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2.9%	직접적 지원 미흡하나, 세계 등 간접적 지원 저비용 민간보육 이용 활성화 * GDP대비 양육 지원예산 : 0.4%	정책적 요인	일·가정양립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일·가정양립관련 * 출산후 노동시장 재진입 보장 미흡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 GDP대비 양육지원예산: 0.5%
육아인프라	공보육 중심	공보육 중심	민간보육중심	육아인프라	공보육이 확충되어 있으나 0-3세 보육서비스 부족	보육 인프라 부족

출처: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 28쪽.

다차원적 사회정책 영역으로서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거시적 사회정책 영역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아동복지를 실현하며 전문노동력으로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시성 저출산·저출생 현상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으로서 특징을 갖는다.



교육정책 영역으로서 전일제학교는 부모의 소득, 사회적 지위, 출신 계층·계급에 의존하지 않는 교육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정책이다.

돌봄정책으로서 전일제학교는 취업활동 등을 이유로 하여 자녀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모를 대신하여 학교 공간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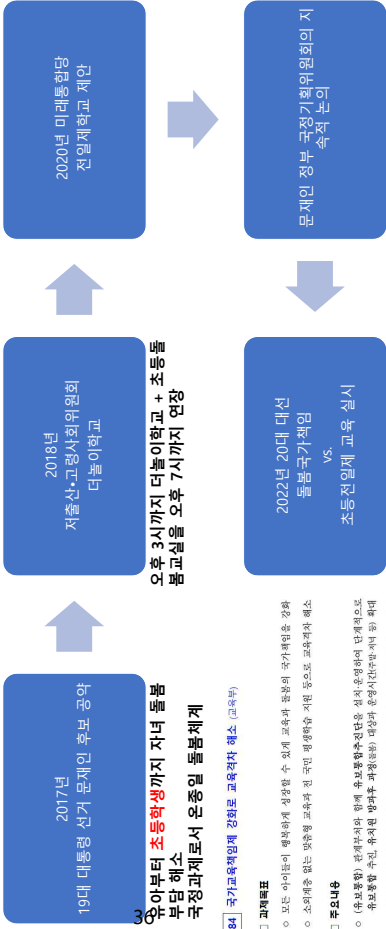
여성(부모)의 일·가정양립을 가능케 함으로써 출산율과 출생률 향상을 통한 가족 구성 가능성을 높였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가족정책 영역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양질의 전문노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동자로서 부모가 자신의 자질과 전문성을 유지·확대할 수 가능성을 제공한다. 점에서 전일제학교는 노동정책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정치 진영을 초월한 아젠다로서 초등돌봄

미진한 초등돌봄체계 구축·확대를 위해 온종일돌봄, 더놀이학교, 전일제학교, 돌봄국가책임 등 아젠다가 나왔다. 돌봄학교는 돌봄에 더하여 국가의 교육책임을 강화하는 국정과제로서 자리매김하였다.

돌봄학교 도입 과정에서 소모적 정치 논쟁을 배제해야 한다.



39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 돌봄 부담 해소**
국정과제로서 온종일 돌봄체계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부)

□ 과제목표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
- 소외계층 없는 맞춤형 교육과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

□ 주요내용

-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운영하여 단계적으로 유보통합 추진,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대상과 운영시간(주말·저녁 등) 확대
 -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유치원-초등 교육과정 연계성 강화 등 추진
- (초등전일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 전일제 학교'를 운영,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이미 우리 곁에 있었던 '늘봄'

늘봄학교는 정지적 합의에 도달한 주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미 우리 곁에 있었다. 초등학교기 돌봄과 교육을 융합하여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1. 돌봄교실
2.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실
3. 놀이, 독서, 휴식 공간

오후 돌봄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스포츠, 방승댄스, 피아노, 바이올린, 창의건축, 드론, 과학실험, 요리, 레고, 컴퓨터, 코딩, 창의미술, 역사, 독서, 논술, 영어, 주산, 암산, 수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갖는다.

경상남도 교육청, 창원시 늘봄 명서(거점통합돌봄센터) 리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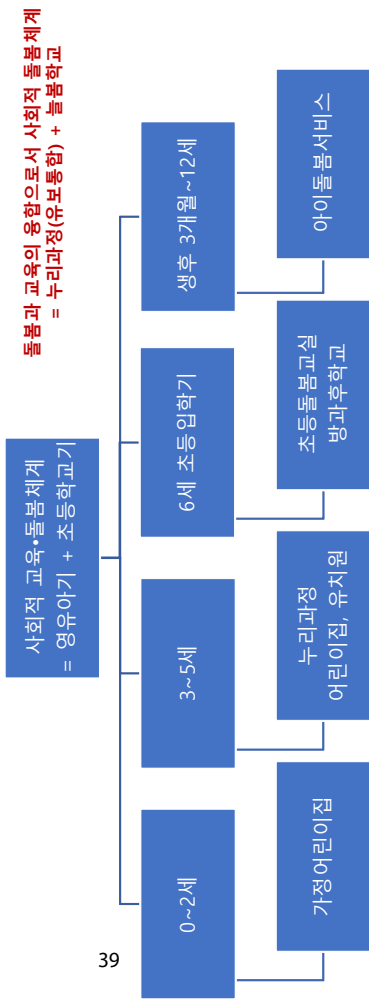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로서 늘봄학교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는 영유아기 뿐 아니라 초등학교(저학년) 시기까지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영유아기 사회적 교육·돌봄 체계는 갖춘 상태로 볼 수 있다. 누리과정의 바로 그 사례다. 그러나 초등학교기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완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영유아기 누리과정에서 내용상 돌봄과 교육의 융합을 시작했다면, 초등학교기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의 융합체계를 완성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아동복지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교육·돌봄체계는 영유아기와 초등학교기에 나누어져 구성된다. 아이가 만3세가 되기 전까지는 가정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 3~5세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다. 6세가 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서비스가 있다.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기에 걸쳐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도 있다.

영유아기 아동 교육·돌봄체계는 상당한 규모로 커졌다. 초등 교육·돌봄체계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초등돌봄절벽** 담론이 존재할 정도다. 사회적 교육·돌봄체계의 마지막 단계로서 늘봄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2013년부터 시작한 영유아기 돌봄과 교육의 융합으로서 누리과정 에 이어서 초등학교기 돌봄과 교육의 융합을 구축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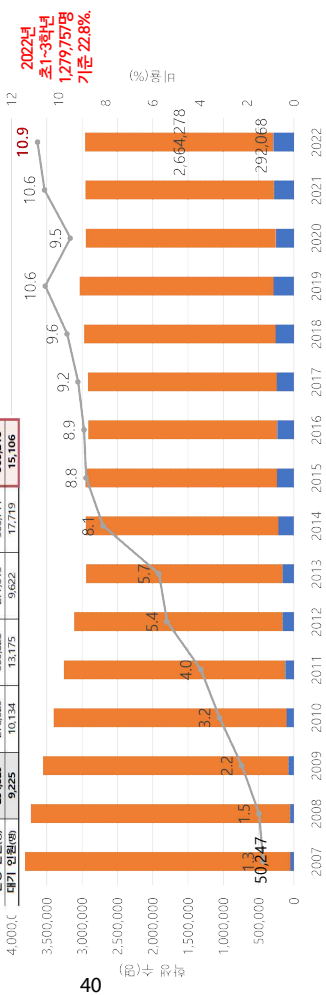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 참여 현황

초등돌봄교실 참여 규모는 크지 않다. 2022년 현재 약 30만 명 수준이다. 공급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부모와 아동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안으로서 사교육 시장의 역할도 있다. 향후 **초등돌봄교실을 늘봄학교가 대체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 학년별 돌봄 참여 비율 : 1~2학년 83.1% / 3~6학년 16.9%

<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17~'22) >

항목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돌봄교실 수(산)		11,980	12,398	13,910	14,278	14,774	14,970
이용 인원(명)		245,303	261,287	290,358	256,213	283,818	292,068
신청 인원(명)		254,529	276,029	309,828	277,513	300,711	305,218
대기 인원(명)		9,225	10,134	13,175	9,622	17,719	15,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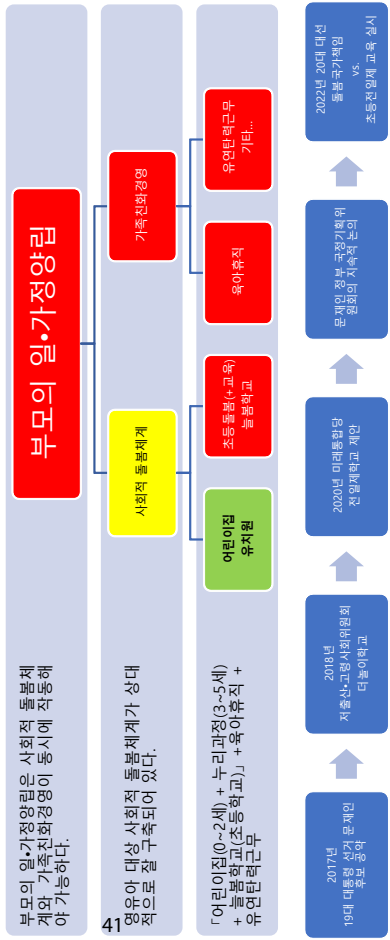
- 5개 지역 214개교
- 디지털.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아침. 틈새. 저녁 돌봄 운영 확대

올해 첫발을 내딛는 214개의 늘봄학교, 3월부터 운영 시작

부모의 일·가정양립부터

사회적 돌봄체계로서 영유아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느 정도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초등돌봄**이 아직 미완성 단계이다. 따라서 부모의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여전히 한국사회에 **빨간색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가족친화경영도 체감도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걸음마 단계이다. 초등돌봄 확대를 완성하기 위하여 **‘늘봄학교’**가 등장하였다. **가족친화경영의 확대와 정착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초등돌봄의 중심이 되는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실천만이 남았을 뿐이다.

늘봄학교는 정치진영을 초월하여 확대를 시도해온 초등돌봄 확대의 이름 중 하나이다. 초등 온종일돌봄, 더놀이학교, 전일제학교 등 제안을 거쳐 이제 늘봄학교로서 도입 및 확대를 앞두고 있다.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과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사회적 돌봄·교육체계와 돌봄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직까지 **부모의 일·가정양립을 가능케 할 수준까지 제도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족친화경영이 자리잡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초등돌봄절벽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사회 지속가능성 위협 요인으로서 저출산·저출생

삶의 질이 낮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기 어렵다. 경제적 생활수준(= 객관적 삶의 조건)과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 주관적 만족도)이 합쳐져서 삶의 질 차원을 결정한다. 내 삶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수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일·가정양립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는 가능하다.

저출산 대응은 비용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비용 문제 해결을 저출산·저출생 대응의 필요조건이라고 한다면, 삶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대책을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맞춤형가 보편화된 현재 일·가정양립은 삶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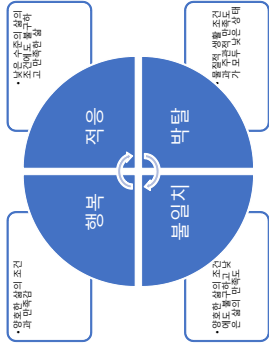
삶의 질 구성 요소

43



행복하거나 주어진 삶에 적응할 때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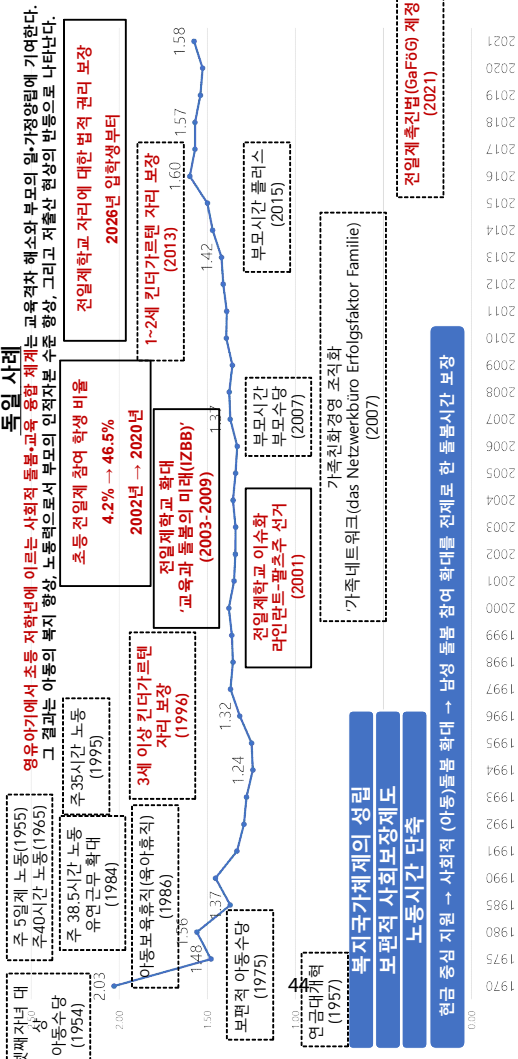
삶의 질 차원



저출산 대응 = 비용(필요조건)에 초점을 맞춘 청년 지원 + 삶의 만족도(충분조건)에 초점을 맞춘 일·가정양립

독일 사례

영유아기에서 초등 저학년에 이르는 사회적 돌봄·교육 융합 체계는 교육격차 해소와 부모의 일·가정양립에 기여한다.
그 결과는 아동의 복지 향상, 노동력으로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그리고 저출산 현상의 반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자녀 대 상 아동수당 (1954)

주 5일제 노동(1955)
주 40시간 노동(1965)

주 38.5시간 노동 유연 근무 확대 (1984)

아동보육휴직(육아휴직) (1986)

보편적 아동수당 (1975)

3세 이상 킨더가르텐 자리 보장 (1996)

전일제 학교 확대 '교육과 돌봄의 미래(IZBB)' (2003-2009)

초등 전일제 참여 학생 비율 4.2% → 46.5%

2002년 → 2020년

1~2세 킨더가르텐 자리 보장 (2013)

전일제 학교 자리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2026년 입학생부터

부모시간 플러스 (2015)

부모시간 부모수당 (2007)

전일제 학교 이슈화 라인란트-팔츠주 선거 (2001)

'가족네트워크'(das Netzwerkbüro Erfolgsfaktor Familie) (2007)

가족친화경영 조직화

전일제 촉진법 (GaFöG) 제정 (2021)

현금 중심 지원 → 사회적 (아동)돌봄 확대 → 남성 돌봄 참여 확대를 전제로 한 돌봄시간 보장

복지국가체제의 성립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노동시간 단축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연금대개혁 (1957)

늘봄학교가 주는 기대효과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통합(= 아동복지의 실현)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부모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

지역사회 소멸 방지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교육인력 수급의 안정적 보장 + (교육)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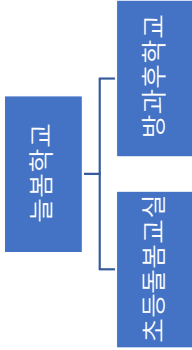
초저출산·초저출생 현상의 반전

늘봄학교 도입 및 확대 과정에서의 과제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관련 전문인력, 지역사회,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 공간 늘봄학교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책임 소재를 최소화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자격 강화와 이에 상응하는 근무환경 개선이 있어야 한다. 가정·늘봄학교 지원센터·를 통해 교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오로지 아동에게 힘을 기울일 수 있는 행정부담제도로 도전할 필요도 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공간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는 변화도 필요하다.

늘봄학교에 대한 기대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학부모의 욕구는 현재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 수준에 토대를 두고 있다.



47

다수 부모가 학교 내 돌봄을 원한다. 안전이나 돌봄의 질을 고려할 때 학교가 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법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 '돌봄 이용희망' 응답자 : ('19) 30.2% → ('20) 41.0% → ('21) 45.2% → ('22) 48.4%
- 희망하는 돌봄유형('22) : 초등돌봄교실(56.2%) > 학교돌봄터(21.0%) > 지역아동센터(9.5%) > 다함께돌봄센터(7.5%)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5.8%)

▷ 현장의 소리 (학부모 의견수렴, '22.8.)

- 학교 울타리 밖에 차량으로 이동하는게 불안하여 가능한 학교 안에서 하면 좋겠음
- 학교는 검증된 분이 오실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선호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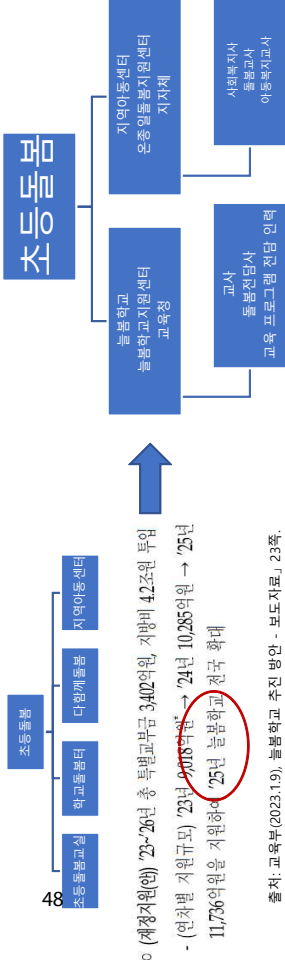
-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방과후학교 운영이 회복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결손(교과보충, 심리, 정서 등) 해소를 지원하여 학부모 만족도 상승
- ※ ① 초등학교 운영률(학교수) : ('20) 63.7%(3,999교) → ('21) 90.4%(5,701교) → ('22) 99.8%(6,292교)
- ② 초등학교 참여율(학생수) : ('20) 20.3%(54만명) → ('21) 36.6%(97만명) → ('22) 45.3%(121만명)
- ③ 초등학교 프로그램 수 : ('20) 90,488개 → ('21) 170,414개 → ('22) 172,644개
- ④ 방과후학교 학부모 만족도 : ('20) 87.5% → ('21) 87.6% → ('22) 89.9%

출처: 교육부(2023.1.9), 늘봄학교 추진 방안 - 보도자료」 3~4쪽.

늘봄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

시간제돌봄으로 진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외하면, 초등돌봄체계는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 다함께돌봄터, 지역아동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초등돌봄교실(이용 인원 약 30만 명)과 지역아동센터(정원 약 12만여 명)의 비중이 가장 크다. 학교돌봄터(정원 1천여 명)와 다함께돌봄(1만 7천여 명)은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다.

초등돌봄교실 등 학교돌봄이 향후 '늘봄학교' 체제로 변화할 것을 감안한다면, 지역사회 초등돌봄체계의 기본 토대는 늘봄학교와 지역아동센터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늘봄학교 확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 형태의 양적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더 많은 돌봄전담사가 필요하고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과 공간을 더 확보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나오는 과제와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교육부(2023.1.9), 늘봄학교 추진 방안 - 보도자료」 23쪽.

늘봄학교에 대한 투자 방향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사람, 공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규모가 결정한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기존 초등돌봄교실 형태가 확대됨을 전제로 한다면 늘어나게 되는 인력, 공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돌봄서비스에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질적 수준 결정 요소이다. 교사의 업무부담만 늘어나는 늘봄학교라면 도입은 불가능하다. 행복하지 않은 돌봄전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아동이 행복해질 수 없다.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환경, 서비스 제공 인력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한 기존 「학교(교사)-돌봄전담사-방과후교사-학부모-지역사회 민간자원-지자체-교육지원청」 간 논의를 본격화할 때이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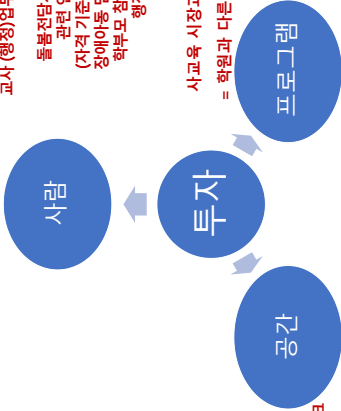
1. 학교 내 돌봄을 원하는 부모들
2. 학교 안에서 행복한 아이들
3. 교사(학교) 주도 프로그램 구성의 효과

교사 (행정)업무 부담 및 책임 범위 감

소

돌봄전담사 근무 조건 개선
관련 인력 자격 관리
(자격 기준 강화 및 보수교육)
장애아동 담당 전문인력 배치
학부모 참여(운영위원회...)
행정지원인력

사교육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학원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프로그램?



학교 내 공간 확보
아동 성장발달에 적합한 공간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내 공간 활용 및 네트워크

돌봄학교 도입 과정에서의 과제

돌봄학교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학교 확산 모델 정립

50

돌봄학교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사, 돌봄전담사, 교육 강사 등 여러 관계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환경 구축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도입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t-blog.tistory.com>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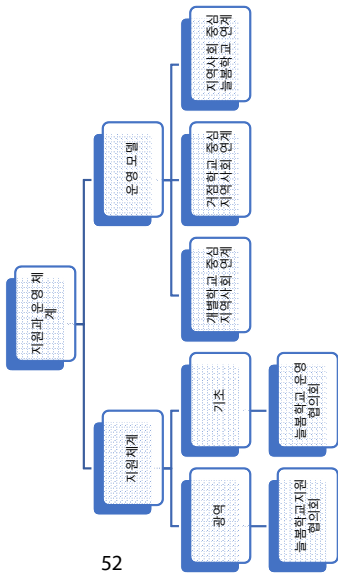
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 교육부 공식 블로그

1일 전 —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계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

변화의 과정과 결과에 아동과 부모, 교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등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와 소통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한 소통의 노력은 더욱 가시화하고 배가하여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늘봄학교의 본격적 출발을 기대해 봅니다.

늘봄학교 지원과 운영 체계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가 없다. 부담만 진득 짊어진 교사 와 돌봄전담사가 지속가능하게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부담 확대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맞춤형 늘봄학교 모델이 있다면, 운영 지원체계도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연합뉴스<https://www.yna.co.kr> > 2023년 11월 16일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권고문에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가 없다"면서 "늘봄학교 운영 지원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행복한 늘봄학교를 위한 투자 확대 방향

늘봄학교 도입과 확대는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틈새돌봄에 대한 투자와는 규모가 달라야 성공할 수 있다. 이미 정부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였다. 늘봄학교를 계기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자할 예산을 지자체가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늘봄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가 늘봄학교 인력 증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교사와 돌봄교사들이 행정 업무와 각종 민원에서 해방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인력 배치가 있어야 한다. 저우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좋은 방과후 프로그램,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은 소수의 인원이라도 개설하여야 한다. 이 부문에서 눈에 띄는 투자 확대가 있어야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더욱 크게 열릴 것이다.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투자

53

학교 공간의 재구성을 위한 투자

늘봄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로써 늘봄학교 인력 증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교육과 돌봄의 융합서비스

늘봄학교는 새로운 변화다. 교육을 하는 돌봄, 돌봄을 하는 교육이라는 낯선 개념을 실천하는 변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교사는 학습지도를 하고 돌봄전담사는 돌보며, 방과후강사는 교과 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고유의 역할을 해왔다.

늘봄학교에서는 지금까지 이들 주체가 해왔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지원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변화다. 교사의 학습지도, 돌봄전담사의 돌봄, 방과후강사의 프로그램 진행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는지를 향후 면밀히 분석한다면 교육과 돌봄, 돌봄과 교육의 융합서비스의 실체를 더욱 뚜렷이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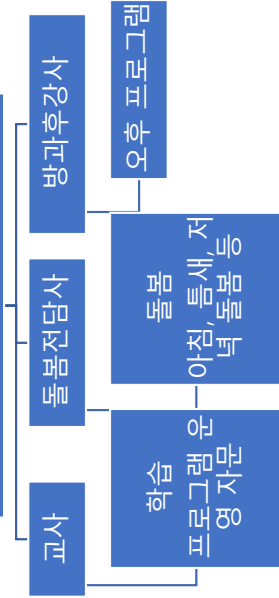
아이들의 입장에서 시작하는 교육과 돌봄

전인격적 성장의 공간

늘봄 바우처를 통한 다양한 기회 활용

일자리 창출

늘봄학교 역할 분담 체계



마무리

 교육부 공식 블로그

<https://if-blog.tistory.com> > ... >

늘봄학교 발전방안, 현장과 함께 모색한다 - 교육부 공식 블로그

1일 전 — 이번에 발표한 권고문은 그동안의 연구, 토론회, 간담회 등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늘봄학교 확대를 위한 △운영체제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의 내용이 ...

늘봄학교의 도입 및 확대를 지원하는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하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없앨 수 있는 가시적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늘봄학교 전담인력제도, 들봄학교 지원센터 등이 제대로 작동
하여 늘봄학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상
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들봄학교가 새로운 차원에서 교권 확립 및 보
호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들봄학교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권합니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토 론

토 론 1

이희진 초등돌봄전담사

아이들이 행복한 초등돌봄교실

서촌초등학교 초등보육전담사 이희진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부모님이 계시고, 행복한 학교에서 거둬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계시듯, 초등돌봄교실에는 초등보육전담사가 있습니다. 초등돌봄전담사인 저는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친구의 역할을 하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는 본질적으로 배움과 돌봄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전에 정규 수업 과정을 마친 이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구,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오후 5시 또는 저녁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이 가장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공적 돌봄으로 매년 돌봄교실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95% 이상으로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사교육 절감의 효과보다는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전담사의 돌봄으로 안정적으로 아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예견치 못한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도 모든 보육기관, 학교는 멈추었지만 초등돌봄교실은 단 하루도 멈춤 없이 운영했습니다. 현장에서 초등보육전담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돌봄의 역할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초등보육전담사의 책임 돌봄’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학교의 역할은 교육을 뛰어넘어 교육복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보육전담사들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인성교육, 안전교육, 기본생활습관교육을 기본으로 과제수행, 일기 쓰기, 독서 활동, 창의 활동 등의 보육업무와 학생관리, 운영계획, 운영 수립, 집행결과, 평가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유의 보육업무를 하면서도 인사 관련(대체인력, 봉사자 인력, 프로그램 강사 채용, 면접) 업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늘봄학교의 업무, 저녁돌봄운영의 업무까지 자꾸만 내려옵니다. 노동 강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이 오전 정규수업 과정과 다른 것은 교육내용, 아이들이 있는 시간 대입니다. 그 외에는 모두 아이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1교실 1담임 운영체계입니다. 탁아돌봄을 뛰어넘는 정책에 부합하는 체계 개편, 제도개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현재 교원은 교육 집중을 위해 행정업무 경감과, 20명 정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이며 아이들을 위해 개선되어야 합니다. 초등보육전담사도 보육 집중을 위해 행정업무경감과 보편돌봄을 위해 돌봄교실 확대와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내 초등보육전담사는 보육업무에 집중하여야 함에도 교사, 관리자보다 더 많은 책임과 업무량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돌봄 종사자의 가치를 폄하하고 ▲1교실에 1명의 전담사 담임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급 외의 담임수당, 자격증수당, 근무환경개선비 등의 전문성에 맞는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이 없으며 ▲전국의 돌봄전담사 중 절반 이상이 시간제 전담사입니다. 짧은 근무시간(1일 4시간부터 6시간제)으로써 압축 노동, 공짜 노동에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간제 전담사의 학급 아이들이 전일제 전담사(1일 8시간제) 학급 아이들에 비해 짧은 보육 시간으로 돌봄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방종 비근무로 인해 고용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지역도 있으며, 교육부의 지침과 권고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도입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수준 향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1년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이들이 감소한다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인프라에도,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육 노동자에게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늘봄학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일방 시행이 아닌 함께 의논하고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침돌봄, 틈새돌봄 운영인력을 자원봉사자, 초단시간, 기간제교원 등으로 하는 상황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으나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수요가 없는 늘봄학교, 저녁돌봄운영, 석식 제공추진은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기자 해소의 방안으로 내놓은 1회성 이벤트인 돌봄데이, 아침(동행)자율동아리, 홈커밍데이, 찾아가는 예술 마술, 학부모와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둔갑하여 집행하고 있는 저녁돌봄 예산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학생중심의 초등돌봄교실이야 말로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돌봄교실입니다. 기존 오후돌봄을 내실 있는 돌봄교실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보편적 공보육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에 힘쓰는 것이 도리이며 넘쳐나는 예산을 초등돌봄과 교육복지에 투자해야 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예산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 학생의 몫이며 학교 내 교원, 교직원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초등돌봄교실 정상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초등돌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공보육을 기틀로 삼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초등돌봄교실 이용을 희망하는 학부모, 학생들은 53만 명으로 신청자 중에 1만 5천 명이 탈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2022년 경기초등돌봄교실운영계획 2P」자료에 의하면 5천 4백여 명의 대기자 수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청 학생들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에 따라, 대기자 수용을 위한 방법으로 돌봄교실 증설, 증반, 돌봄전담사의 충원에 대한 대책과 학생 중심의 돌봄 형태의 다양화, 지역연계 등의 모델 확산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1교실 정원확대는 지양해야 합니다.

둘째, 시간제로 근무하는 전담사의 전일제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간제 전담사(1

일 6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이 즉, 돌봄교실 운영시간이 됩니다. 특히, 방학이 되면 운영시간이 짧아 전일제 전담사(1일 8시간제)에 비해 짧은 보육시간을 제공하여 ‘돌봄 차별’이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합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담임제로 안정되게 운영되지 못하고 옆 반으로 이동 합반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돌봄 아동들은 ‘미운오리새끼’가 됩니다. 더이상 전담사의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보육 시간과 귀가시간이 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하며 보육을 위한 근무시간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전문성에 맞는 임금과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육 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수당이 없으며, 1교실 담임제 운영임에도 담임수당도 없습니다.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운영책임수당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학교 내 업무협조구조 없이 전담사 나홀로 보육업무, 행정업무, 심지어 인사채용, 급간식업체 선정 계약 및 관리업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아무런 처우 개선 없이 새로운 목적사업(17시 이후 석식 제공)을 추진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목적사업에 따르는 물적, 인적 충원이 분명히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초등보육전담사(전일제)에게 저녁 및 석간식 관련 업무(운영계획, 수요조사, 배분, 식생활지도, 안전지도, 정리정돈 등)로 업무 과중과 근무조건 저하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사의 업무경감방안이나 처우개선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등의 특정가구의 자녀만이 이용했던 돌봄교실이었던다면 현재는 대부분의 가정이 방과후 과정의 보육,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결국, 지금의 초등돌봄교실은 보편복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여성부의 돌봄서비스사업은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대상, 환경, 이용시간, 장소, 구성, 성원, 고용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국 17개시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길라잡이”에 의존하며 운영하는 형태로 돌봄 차별, 책임 떠넘기, 질적 편차, 고용갈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 내 돌봄이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공적돌봄, 보편돌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4년부터 초등돌봄교실은 공공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19년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껏 초등돌봄교실은 법적 근거 없이 초등보육전담사의 희생만을 강요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와 교육부는 초등보육전담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처우개선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내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오후 돌봄교실을 적극적으로 강화 시켜 주십시오.

마치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느낍니다. 한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역할입니다.

단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향이 같다면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으며 방법을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토 론

토 론 2

손재광 방과후강사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강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손재광

1. 서론

:늘봄학교의 세가지 축인 정규수업과 방과후학교프로그램, 돌봄의 유기적 결합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돌봄이 시범운영을 넘어 정상적인 교육제도로 정착되길 바라면서 늘봄학교 방과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방과후강사의 현황과 과제를 말씀드립니다.

2. 방과후학교 현황과 과제 (23.4.교육부)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운영학교수(교)	6,153	3,095	2,211	11,459
비율(%)	99.6	94.8	92.9	97.0
참여학생수(천명)	1,310	309	440	2,059
비율(%)	50.3	23.3	34.4	39.5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기준 50.3%의 참여율로 2010년 후반 이후 정체·감소세를 보임. 특히 코로나 공교육 멈춤 이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

-> 늘봄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 One+One 프로그램 정책은 단위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가?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과	수(개)	66,175	25,162	53,426	144,763
	비율(%)	33.6	52.4	79.6	46.4
특기 적성	수(개)	130,636	22,898	13,684	167,218
	비율(%)	66.4	47.6	20.4	53.6
합계		196,811	48,060	67,110	311,981

:초등 기준 교과보충과 특기적성 비율이 3:7로 초등학생의 경우 예술,문화,체육과 같은 특기적성 기회제공과 역량함양에 대한 기여도가 큼.

->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질높은 교육과 돌봄에 충족하는가?

->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과후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효율성있게 운영되는가?

(3) 프로그램별 강사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합계	현직교원 (A)	26,128	30,512	44,885	101,525
	비율(A/C)	23.5%	73.3%	90.5%	50.1%
	외부강사 (B)	85,127	11,089	4,729	100,945
	비율(B/C)	76.5%	26.7%	9.5%	49.9%
	총계 (C)	111,255	41,601	49,614	202,470

:방과후프로그램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내부강사(교원) 10만과 외부강사(위수탁 방과후강사) 10만,무려 20만에 달한다.

-> 늘봄학교의 모토인 ‘에듀케어’ 교육의 성공적 수행에 가장 큰 요소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인 늘봄학교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은 ‘인력’에 대한 질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 교원의 업무경감이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방과후학교가 ‘외주화’라는 시장논리로 업체위탁 운영됨으로써 방과후학교의 운영주체인 강사가 어떻게 공공성을 상실하는가?

3. 결론

:지난 7월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 중간보고회’에서 미래사회의 교육과 돌봄에 대한 여러 요구가 늘봄학교 운영의 배경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의 사례 발표 속에 정규수업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기르면서 돌봄의 공적기능까지 수행해 온 방과후학교가 늘봄학교 체계 속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부족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이는 방과후학교가 공적역할에 비해 아직까지 수익자 부담을 바탕으로 사적영역에 기댄 체 운영되고 있고 그 업무마저 기피요소로 손쉬운 외주화의 길목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정책인 늘봄학교의 성공적 수행에 양질의 교육을 담당하는 방과후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심도있게 제안되고 현실화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토 론

토 론 3

황수진 교사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학교돌봄교실 운영지원 방안

인천이음초등학교 교사 황수진

2023년 3월, 7개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늘봄학교가 시범운영되었다. 늘봄학교라는 틀 안에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뿐 아니라 새롭게 아침돌봄, 초1에듀케어, 긴급돌봄 등의 틈새돌봄이 불시에 시작되었다. 지금의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이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돌봄교실 제도가 늘봄학교가 되면서 희망자에게 모두 제공된다는 전제가 새롭게 붙게 되었다.

돌봄은 정규교육과 별도로 학생들이 학습의 피로를 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가정에서 제공 받지 못하는 돌봄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서,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학생들의 활동과 돌봄을 늘봄학교로 통합함으로써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사업의 역할과 경계를 무너뜨렸다. 늘봄학교 정책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여성노동력 확보를 위한 철저히 기업과 학부모 중심의 정책이다. 진정 학생들을 위한다면 교육과 돌봄이 서로 균형을 잡고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체성이나 시행을 위한 교육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각종 틈새 돌봄의 시행은 철회해야 하며, 수익자부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정확한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돌봄의 협업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늘봄학교라는 이름으로 무작위적으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틈새돌봄을 섞어서 추진하게 되면서 오히려 학교 구성원간의 업무분계가 사라져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누구의 일'로 갈라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했을 때, 진정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1. 돌봄교실 정규 프로그램 마련

돌봄교실의 초기 도입이후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며 그 규모가 확대되어 전국의 초등학교에는 거의 대부분 돌봄교실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여전히 돌봄교실의 운영은 담당자들이 알아서 만들어 가야한다.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돌봄전담사 또는 담당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위한 준비를 오롯이 담당해야 한다. 적어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대별 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정해서 관련 기자재, 활동교구 등을 표준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또한 너무 학습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특성화프로그램 제공 등에 대한 교육청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공백을 채워주기 위한 전문적인 특성화 수업도 제공되어야 한다. 초등 저학년 시기 사교육 선호는 예체능, 특히 악기와 운동 영역이므로 이 부분에 전문 강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특성화 수업 진행을 통해 독박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돌봄교실 담당자들의 부담을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3. 급간식 지원에 대한 문제

돌봄교실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과 관련한 센터형 돌봄기관에서도 급간식비는 수요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행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관리도 어렵다. 지방 농산어촌에서는 더욱 준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별도의 틈새돌봄을 억지로 운영하거나 단기성의 활동으로 끝나는 강의 프로그램보다 이 부분을 안정화하여 지원체계를 만들어 학생들의 급간식 안전 뿐 아니라 이를 담당하는 이들의 행정적, 관리적 소모를 줄여야 할 것이다.

4. 돌봄교실 공간 분리

돌봄교실도 병설유치원과 유사한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냥 방과후에 학생들이 가서 머무는 곳 수준으로 생각하던 방과후 돌봄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

들의 안전문제, 외부인 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으로 돌봄교실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어졌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 갇혀 지내지 않도록 교실 공간을 확대하고 놀이 등 신체 활동 및 별도 휴게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외부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전히 수도권은 과밀학급이 많아 대기수요를 충당할만한 공간마련이 어렵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돌봄교실 모듈러, 공간임대를 통한 수요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취학 학생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교실을 증설하지 않고 겸용교실로 땀땀을 지속하면서 벌어지는 불편함과 비안전성을 고려한다면 돌봄교실 공간을 분리하였다가 유휴교실이 충분할 때 제대로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5. 돌봄교실 안전을 위한 전담사 지원 및 연수체계 마련

교사들도 변화하는 교육적 요구를 배우고 이를 학생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연수를 실시한다. 그러나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전담사들은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 이를 위해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교육청 내에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한 파견을 활성화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정규수업의 학생들과 다르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사고, 상담 등 다양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에 역부족한 업무 현실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6. 방과후 학교 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

현재 운영되는 각종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관리 등 늘봄학교 시행 이전에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거의 학교 하나급의 방과후 부서를 몇 명의 담당자, 심지어 한 명의 부장이 토탈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은 늘봄학교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교육부장관은 미국식으로 몇 시 이후에 토탈업체 등이 별도로 학교에 들어와서 운영하고 나가는 이원적인 체계로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6학년의 수업 종료 시간이 다른 상황에서 지금도 저학년에 맞추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다보니 고학년은 특별실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형편이 곳이 많다. 수업 중 방과후수업으로 인한 수업방해도 겪고 있다. 또한 강사의 결보강 문제가 발생한 것도 교사가 안내하거나 수강료 환불까지 일일이 신경쓰느라 행정실과 실갱이를 해야 한다.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수익자 부담으로 자신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들어온 강사들의 관리는 강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는 별도의 수당이 1원도 없이 타인의 소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동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10년이 넘도록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늘봄학교라는 학교를 새로 만들었다면 새롭게 학교를 세우는 정도의 규모로 인력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여전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조차 온전히 체계를 만들어 자리 잡지도 못했는데, 이를 위한 지원이 아닌 문어발식 확장만 거듭한다면 철근이 부족해서 무너진 아파트처럼, 늘봄학교도 똑같이 붕괴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토 론

토 론 4

배수민 학부모

어린이가 행복하고 양육자가 안심하는 늘봄학교를 기대하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배수민

1. 들어가며

이름이 좋았습니다. 학교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언제나 봄과 같은 품을 내어줄 것이라는 기대하게 만드는 ‘늘봄학교’라는 그 이름이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현재 늘봄학교 제도가 실제로 학생들을 잘 돌봐주고 양육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시범단계니까 ‘서서히 더 좋아지겠거니’ 하고 있었습시다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애초의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 2024년에 늘봄학교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전격 결정하였습니다. 그 발표가 올해 8월 초였는데 연말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늘봄학교의 업무 전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돌봄 공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얼마나 마련할 것인지, 돌봄 내용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구성원들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입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초등돌봄교실조차 아직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일부가 교육부 고시 등 행정명령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돌봄교실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학교는 보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교사가 보육을 하면 교권이 추락한다’라고 주장하는 교사측의 반발 때문에 법개정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늘봄학교가 내년 3월부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아이들은 행복하게 학교에 머무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과연 내년 3월에 우리가 바라던 그 봄이 올 수 있을까요?

2.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아이 학교를 중심으로

(1) 오전돌봄 프로그램 - ‘아침이 따스한 학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인천 송도입니다. 대규모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고 있는 신도시지요. 유입되는 인구의 특징을 보면 이제 막 학령기에 접어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프라는 극히 적어서 주로 학교에 돌봄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덕분에 일명 ‘K-돌봄교실’이라 불리는 태권도학원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지요. 공적 돌봄기관이 전무한 상황이다보니 양육자들은 늘봄교실 정책 도입이 반갑습니다. 인천교육청은 우선 오전 늘봄교실부터 추진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8시반까지 일찍 등교한 학생들을 교내 도서관에 모두 모아 놓고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학교는 970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는데 매일 60~70명 정도의 학생이 아침 돌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늘봄교실이 그냥 일찍 온 학생들을 교내 도서관에 모두 모아 놓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어쨌든 추운 교실에 아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어른이 있고 친구가 있는 곳에서 안전하고 따뜻하고 덜 심심하게 지낼테니까요. 무엇보다 아침 돌봄이 필요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늘봄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신청이나 추천, 맞벌이 증명서류 제출, 소득정도 증명자료 제출 없이 그 때 그 때의 필요에 따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양육자에게 정말 필요한 형식의 돌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버 일자리사업의 어르신이나 자원봉사자와 같은 비전문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치된다는 점, 아무 프로그램도 없이 아이들을 모아놓기만 한다는 점 등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경기도의 일부 교육청은 ‘아침첫끼’ 행사를 늘봄 시범학교 당 하루씩 돌아가며 진행했다고 합니다. 비록 1,2학년만 대상이었고 쿠키, 빵, 주스 등 완제품으로 구성된 식단으로 운영한 단 하루의 이벤트였지만, 간식 섭취 후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니 꽤 괜찮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침간식 제공이나 산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침 돌봄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아침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2) 1학년 오후돌봄 프로그램 - ‘에듀케어’

오전돌봄과 더불어 1학년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오후돌봄이 목적인 ‘에듀케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프로그램이어서 주로 저처럼 맞벌이가 아닌 가정,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진 가정의 학생들이 이용 대상이었습니다. 인원제한도 없었기 때문에 에듀케어는 인기가 많았고 교내 설문 결과 이용 후기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단 6일 뿐이었고 오후 2시까지만 운영되었습니다. 학교 측 설명으로는 일단 선생님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이용시간이나 장소가 겹쳐 더 지속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3월 초에 시작하여 3월 말에 끝나기도 하고 6월 말이나 7월까지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운영 기간이나 프로그램이 다른 것을 보면서 교육부는 진짜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없이 일선 학교에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아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3) 틈새 돌봄/방과후학교 연계형 프로그램 - ‘늘품꿈터’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수업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라고 하고 그것을 인천은 ‘늘품꿈터’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인천에선 30개 모든 시범학교가 이 늘품꿈터를 운영했습니다. 저희 2학년, 4학년인 두 아이들도 사전신청을 통해 이 늘품꿈터를 이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곧잘 이용했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출결사항을 바로바로 양육자에게 알려주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공강시간에 늘품꿈터 교실 친구가 아닌 자기 반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고 결국에는 늘품꿈터 돌봄교실 신청을 취소하였습니다. 늘품꿈터 교실이 재미없는 이유는 그냥 아이들을 모아놓기만 한 공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공강시간에 아이들을 어른의 지도, 감독 하에 두면 안전하긴 하겠지만 정말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 오후돌봄이야말로 늘봄학교의 주 기대역할

사실 늘봄학교 제도를 도입한다고 들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오후돌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 정작 가장 필요한 오후돌봄을 운영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경력 단절의 순간이라는 데에 공감합니다. 아이는 아직까지 돌봄이 필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교사가 돌봄을 거부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은 특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돌봄전담사가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늘봄학교에서의 돌봄은 주로 자원봉사자, 기간제 교원, 비정규직 행정인력 등이 담당했으며 정규직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맡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비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학생과 양육자가 희망하는 양질의 돌봄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것은 실제 양육자 수요 결과로도 나타났습니다.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이 시범운영에 나선 5개 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4월에 비해 9월에 더 늘어난 수요는 아침돌봄(75→79개교)뿐이었고 저녁돌봄(202→117개교), 일시돌봄(58→16개교), 틈새돌봄(140→95개교) 등은 모두 수요가 줄었습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취미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학습을 보충하면서 개인에 맞는 맞춤 돌봄이 보장된다면 양육자들은 더욱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4. 돌봄은 교육의 기본이자 기초

교사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돌봄은 교사의 업무가 아니라고요. 돌봄을 하기 위해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면서 마치 교육(학습)이 돌봄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을 교육하는 과정이 과연 돌봄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과정일까요? 가르치는 업무가 돌보는 업무보다 더 가치있는 일일까요?

아이는 어른의 뒷모습만 봐도 배운다는데, 많은 시간을 함께 지내는 선생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초등학생 시기에는 돌봄과 교육의 경계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둘 다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작용합니다. 아이가 충분한 보살핌을 받을 때 학습의 효과도 오르기 마련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교사들도 학습만을 가르치려 교단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학습이라면 이미 사교육이 더 잘하는걸요. 돌봄이나 인성교육조차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양육자들은 공교육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학교의 진짜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고 돌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이나 학원 강의에 익숙해지며 학교에 왜 가야 하는지 물었고 돌봄은 각자도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초등학생들의 학습능력은 하향평준화되었고 학습격차도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우울증을 겪거나 ADHD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온라인으로 학습만 했던 학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학교는, 교사는, 교육은, 돌봄이 기본이고 기초여야 합니다.

5. 놀봄학교가 진정한 ‘놀 봄’같은 돌봄체계가 되려면

일단 지금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학교 구성원들 간의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았고 아이들을 돌볼 물리적인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으며 돌봄을 전담할 사람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질높은 급간식체제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처럼 임시인력으로 학생들을 모아놓는 수준으로만 진행하려 한다면 놀봄학교는 파행을 겪을 것이 뻔합니다.

돌봄을 전담하는 사람이 정해진다면 돌봄의 가치에 맞는 적정 급여와 휴식, 노동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처우가 개선되면 돌봄의 질도 달라질 것이고 아이들도 더 행복해지겠지요.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른 등교, 늦은 하교가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하는데 돌봄의 질이 높아지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보다 어린 영유아들도 어린이집에서 더 늦은 시간에 하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맞는 편안한 휴식과 돌봄, 식사,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놀봄학교의 돌봄교실도 어린이와 양육자의 요구에 맞는 공간으로 설계되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신선하고 맛있는 급간식이 제공되며 선생님이 봄날의 햇살처럼 아이를 잘 돌봐주신다면, 학교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고 교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일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나가며

늘봄학교 시간만 늘리는 데 급급한 정부를 보면 돌봄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도, 돌봄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저녁 8시까지 일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늘봄학교가 아무리 훌륭하게 구축된다고 한들, 장시간 학교에 남아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과, 늦게 데리러 올 수밖에 없는 양육자 모두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무를 확대하는 등 가정양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출생률이 충격적으로 낮게 나오는 이유도 내 아이가 행복하지 못하고 양육자로서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은 힘들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엄청난 성숙과 성장,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사회가 박탈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노동의 시간을 아이에게 더 쏟을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고 학교에서는 돌봄이 충분히 녹아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토 론

토 론 5

이성희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 중앙지원센터장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

메 모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이대로 괜찮은가?

늘봄학교 긴급진단 국회토론회